

### 대형 국책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금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 및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04.12.7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계획 및 도로건설공사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의 국책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모든 국책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 대형 건설사업의 계획수립단계인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구간 공사 등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어 시행단계에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국도, 지방도 등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 노선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로개설로 인한 산림 훼손, 생태축 단절 등 환경문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로, 댐, 운하 등의 건설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적극 고려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토록 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여 국책사업이 원활하

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각종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대안설정 및 평가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체계를 도입 중에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가 사전에 논의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기술(ET) 교육 혁신 지원사업 공고

환경부는 날로 발전하는 첨단 환경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 중심의 고급 기술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기술(ET) 교육 혁신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제1차년도 인력양성사업을 담당할 주관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동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산·학계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5개 첨단 환경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올해부터 2009년까지 1개 분야당 2개 대학, 총 10개 대학을 환경기술인력 양성 주관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동 사업에 국고 1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1차년도인 금년에는 그간 산업계, 학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인력양성 지원분야로 결정된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분야와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에 각 1개 대학을 인력양성 주관대학으로 공모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다음달 2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환경기술 교육 혁신 주관대학으로 선정되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억4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며 주관대학은 이를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장학금 지급, 위촉교수 확보, 교재개발, 세미나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 사업은 기존의 대학 교육 프로그

램과 차별화 하여 산업체 인력을 석·박사 과정 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산업체·연구계 전문가를 위촉 교수로 채용하는 등 철저히 산업현장의 기술 수요에 맞춘 실무·현장 지향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환경부는 동절기를 맞아 자동차 공회전 및 매연과다 배출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매연배출이 많은 대형경유차량에 대해 차고지 및 터미널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전세(관광)버스 및 대형화물차량 등으로 지난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말까지 전국의 시·도 상설단속반(82개)과 시·군·구 수시단속반(213개)이 차고지 및 터미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명령(3~7일)과 함께 과태료(5~50만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동시에 노후된 시내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하거나 저공해차량(천연가스버스)으로 대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경우,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매연과다배출경유차량을 내년부터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대책사업에 포함시켜 가장 우선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OC·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CNG)으로 개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 유독물 관리, IT 기술과 접목하여 물 싹틈없이 관리

환경부는 유독물 취급량, 연간유통량·유통물질 수 등 유독물 유통실태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유독물 유통실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90.8)이래 매년

다 유독물영업자(수입업자 포함) 등에게 유독물취급량 및 유통실태 등을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의 오류로 신뢰성 있는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유독물영업자가 쉽게 인터넷상에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이번달까지)하도록 전산체계를 갖추고, 지자체 공무원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독물영업등록 현황 등 기본자료를 DB화하였다.

특히 시안화합물, 포름알데이드 등 18개 사고대비물질과 고독성물질을 중점관리대상물질로 선정하고 제조에서 폐기까지 입출고 내역, 폐기량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구현하여 유독물 유통경로를 폐쇄회로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관할 유독물 영업등록 및 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법제16조)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DB화 하고 전국 유독물 관련공무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에 결격사유 등을 현지 조회하는데 소요되었던 시간과 인력 등 행정비용 절감으로 유독물 영업자 관리에 효율을 제고하게 되었으며, 유독물 사업장에서 유독물 누출시 등 사고를 대비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유입로 및 방류하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공사 환경관리 획기적 개선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 및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를 제정·보급기로 하였다.

그간 도로, 하천 및 철도 등 각종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서 토목공사일반·도로공사·하천공사·건축공사 등 16개 표준시방서에서 산발적·개략적으로 제시하였던 규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강화·정비하여 건설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자연생태계 보전·복원대책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지방서의 각 규정은 각종 공사계약의 일부가 되는 규정이므로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동 지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 등의 적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환경의 오염방지대책으로 건설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구조물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세륜시설, 방진덮개, 방진망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와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오·폐수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는 침사조·저류조·침전조·방류조 등 오·폐수시설을 설치토록하고 토사유출이 발생하는 공사장에는 침사지·오타방지막 등 저감시설 설치와 관리방법, 또한 발파 및 항타시에 발생하는 소음·진동 방제공법과 장비 가동으로 인한 공사소음 저감을 위한 가설방음벽 설치 공법 등을 규정하였다.

자연생태계의 보전·복원대책으로서 건설공사시 발견되는 오염토양의 처리공정,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부지정지 및 조경공사시 표토의 보전 및 활용공법을 규정하고 도로공사 현장에 동물주의 표지판 및 곤충유인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등 수원을 보호하는 공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공사로 인해 야생 동·식물, 어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되는 지역에 생태통로, 동물침입 방지시설, 어도설치 공법 등을 규정하였다.

### 하수처리장 운전개선방식 우수사례집 발간

환경부는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소규모 비용으로 일부 시설을 개선하여 방류수 수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절감 효과를 함께 이루어낸 6개 우수사례와 10개 개선노력사례를 발굴하여 「하수처리장 운전개선방식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 사례집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시설개량방식(Retrofitting)이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수처리시설 운전방식을 개선(Renovation)하여 기대 이상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우수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하였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경기 안양박달하수처리장 : 하수슬러지 소화조공정을 직접가온방식에서 간접가온방식으로 변경하여 슬러지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메탄가스 발생량(메탄가스 8십만m<sup>3</sup>/년 추가발생)을 극대화하여 연간 약 2억원의 운영비 절감, 경남 밀양하수처리장 : 침사지를 유량조정조화하고 유입하수와 반송수를 간헐적(Batch식)으로 운영하여 질소·인 방류수질 개선(T-N 23.3→12.9mg/L, T-P 2.3→1.0mg/L)하고,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50억원 예산절감 경북 안동하수처리장 : 포기조 월류수로에 PAC(Poly Aluminum Chloride)를 투입하여 방류수질 77% 개선(BOD 12.2→2.8mg/L), 광주광역시 광주하수처리장 : 최종침전지의 바깥쪽 웨어에 격막판을 설치하여 방류수질 76% 개선(BOD 12.0→2.9mg/L), 충남 청양하수처리장 : 회전원판조 후단에 PAC 투입하고, 내부 반송배관을 설치하여 미생물 농도를 증가시켜 방류수질 88% 개선(BOD 11.3→1.3mg/L), 경기 양평거리마을하수도 : 접촉포기조 후단에 황담체를 충전한 SOD 반응조를 추가로 설치하여 BOD, T-N 방류수질 개선(BOD 5.4→2.5mg/L, T-N 23.5→13.9mg/L)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하수처리장의 담당자에게는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아울러 매년 우수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분야에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산자부, 혁신성과 경진대회 갖고 성과 확산

산업자원부는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 강당에서 산자부 혁신팀과 37개 산하기관장, 산하기관 혁신팀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산업자원분야 혁신성과 경진대회'를 가졌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 혁신상은 한국중부발전의 '연소기술혁신을 통한 폐자원 재활용 및 민원해소 사례'가, 우수 혁신상은 기술표준원의 'T기술을 활용

한 고객만족도 제고 사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생산성 및 고객서비스 제고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혁신은 시대의 소명이며, 조직의 생존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전제하고 "이제는 정책고객인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혁신활동의 결과 도출된 손에 잡히는 성과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이 다함께 느끼고, 이러한 성과의 토대 위에서 보다 발전적인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 주민이 지역 환경오염 해결에 발벗고 나서

전국적으로 지역주민 등이 나서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작년 하반기(04.10 월말 기준)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환경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환경오염행위 등을 감시·단속하는 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은 모두 231개로 작년 상반기(122개)에 비해 감시단수가 2배정도 증가되었고 감시요원도 16,788명으로 작년 상반기(4,965명)에 비해 3.4배 증가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단」의 자체 순찰반 운영 등을 통한 환경오염 사전계도 건수가 75,227건으로 작년 상반기(19,188건)에 비해 4배정도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에 참여하여 환경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한 건수가 760건으로 작년 상반기(277건)에 비해 2.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강원도의 경우 환경오염행위 계도 44,478건, 위법사례 적발 983건, 행정기관과의 합동단속 968건 등이었으며 경기도의 경우(안산시 민간환경감시단 등) 환경오염행위 계도 23,543건, 위법사례 적발

97건, 행정기관과의 합동단속 2,099건(384건 적발) 등으로써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04년 우수환경도서 92종 선정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 출판업계의 환경도서 출판의욕을 고취하고자 '2004 우수환경도서 선정행사'를 실시한 결과, 256종의 응모도서 중 총 92종의 도서(접수도서 대비 35.9%)를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발표하였다.

'93년부터 시작되어 7회째를 맞이하는 '2004 우수환경도서 선정행사'는 각 5인의 민간위원이 실시한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2002년보다 33% 증가한 256종(2002년: 192종 접수)의 도서가 접수되었다.

2004 우수환경도서 선정현황을 주 독자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유아용 4종, 초등학교 저학년용 16종, 초등학교 고학년용 23종, 중·고등학생용 5종, 일반인용 29종, 전연령층 15종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환경도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 우수환경도서 중 숨쉬는 도시 꾸리찌바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의 점수(10점 만점에 9.04)를 받았으며, 이책의 출판사인 현암사는 '각시봉어가 장가간대요(유아용)' 등 총 10권이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됨으로써 우수환경도서를 최다 출간한 출판사가 되었다.

환경부는 2004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된 도서에 대해 도서별로 우수환경도서 선정증을 수여하고 영풍문고에서 우수환경도서 전시행사를 갖는 한편, 해당 도서에 상징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환경도서 목록을 학교, 공공기관, 환경관련 민간단체 등에 배포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다. ◀